

민주당 위기의 3대 요인

최태욱(한림국제대학원대)

1. 민주당 위기 상황

- o 새누리당의 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 (최근 2개월): 44% 전후 vs. 20% 전후
- o 안철수 예비 신당의 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 (올 11월): 27% vs. 12%
- o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지지 하락 (안철수 세력으로 이동)
- o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48.6%와 진보층의 51.7%가 안철수 신당 지지로 이동
- o 군소정당으로 전락? 혹은 안철수 신당에 접수?

2. 위기의 3대 요인

1) 안철수 세력의 부상과 속수무책 민주당

- o 2011년 12월 발표 민주당 새 강령: 당의 목표는 경제민주화의 달성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선언 --> 분명한 중도진보 정당 강령임
-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 강령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론 및 복지국가론과 경합
- 그러나 대선 패배 후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관련 공약을 거의 무시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
-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당의 현실적 대안을 끊임없이 생산, 제시, 설명,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스스로 별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함 --> 진보파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 증대는 당연
- 정부여당이 설정해놓은 안보 프레임에 걸려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며 사회경제 프레임으로 정국을 주도해야 함. 그래야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진보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지지를 유지 확대해갈 수 있음
-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슈를 포기하고 기존의 전통적 보수 이슈인 안보와 치안으로 돌아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슈를 점유하는 것이 유리함 (issue ownership 발휘)
- 물론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 정책과 대안 제도들은 일반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, 단계적,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함
(예: 점진적이고 완만한 증세 조치에 의한 단계적 복지 확대 방안을 보여주는 로드맵 제시)

-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영역에서 확실한 issue ownership을 발휘함으로써 ‘중도 진보’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것이 안철수 신당과의 차별화에도 기여할 것임
- 진보파 유권자들과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하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영역을 방기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볼 때, 이들 영역에서의 issue ownership을 발휘는 더 이상의 이탈자 방지와 기존 이탈자의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임
-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고 하는 중도진보의 이슈 영역을 안철수 세력에게 빼앗길 경우 민주당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. 안철수 신당에게 민주당이 접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임

2) 박근혜 정부의 독선·독주와 야성(野性) 잃은 민주당

-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소위 ‘민주주의의 후퇴’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.
 - 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는 창피할 정도로 유치한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손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다루기는커녕 발뺌과 감싸기 혹은 덮어씌우기로 일관하고 있다. 이 국기 문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과 결사의 자유마저도 위협받고 있다.
 - 시민사회와 학계, 종교계 등에서는 드디어 ‘대통령 사퇴론’까지 등장했다.
-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당(정치인들)의 목소리는 신부님들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와 소시민들의 한탄소리보다도 작다. 잘 들리지가 않는다.
 - ‘민주’당의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다.
 - 민주당의 그 많던 ‘386’ 정치인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?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지 않았던가?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에마저 그들은 어딘가에 따로 모여 예의 그 ‘정치공학’을 공부하고 있는가?
 - 야당은 영어로 opposition party라고 한다.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소임이다. 설령 정부여당이 잘 할지라도 애써 문제점을 찾아 비판하고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터인데,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야성(野性)을 왜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가? 지지 하락은 당연한 일이다.

3) 연속적 선거패배와 위기 불감증의 민주당

- 수많은 선거에 연거푸 패했으면서도 당 내외에서 부단히 제기돼온 당 개혁 요구는 계속해서 무시 혹은 경시하고 있다.
- 좋은 개혁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.
 - 2011년 7월 당개혁특위에서 근 1년간의 준비 끝에 발표한 소위 ‘천정배 개혁안’

은 상당히 훌륭한 개혁안이였다.

- 2013년 3월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에서 발표한 소위 ‘정해구 혁신안’ 역시 나름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었다.
- 그 개혁안들대로만 하면 그 알량한 당내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계파정치나 공천 잡음 등과 같은 민주당의 고질병들은 상당히 치유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그리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책임정당으로 멋지게 발전해가고 있었을 것이다.
- 그런데 그 개혁안들은 지금 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걸까?
- o 시민들과 당원들의 요구가 거센데다 좋은 개혁 방안도 마련돼 있는데 그 실천을 끝내 못하는 있는 위기 불감증의 민주당을 과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겠는가?

3. 개혁 리더십의 부상이 관건

- o 당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강력한 리더십의 전면 등장이 요청되는 상황
- o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 크게 패하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을 것
 - 내년 6월과 7월의 참패는 그 전의 경우와 크게 다른 의미
 - 과거에는 양당제 조건 하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진보파 유권자들을 믿을 수 있었겠지만 이젠 유력한 제 3의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는 안철수 신당의 존재로 인해 민주당의 참패는 당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
 - 그렇게 되면 결국 6월과 7월 이후 당 개혁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은 리더십이 등장하여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전에 당을 쇄신해놓으려 할 것
- o 그런데 꼭 그 상황까지 몰려야 할까?
 - 지금부터라도 당장 당을 쇄신하고, 야성을 회복하고,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영역에서의 이슈 옹호를 발휘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?